

# 일본 국민들의 영유권 인식 조사: 일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김미경 히로시마시립대학교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이 연구는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사회, 심리적 상황과 영유권 분쟁 관련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무작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여론 조사와 정책 엘리트 면담, 주요 일간지와 기타 여론 조사들과의 비교 등을 통한 질적, 양적 분석 결과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상황과 영유권 분쟁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 교육 수준, 지역, 일본의 미래,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다섯 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 연령이 높을수록 센카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해짐을 알 수 있고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할수록 중국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강력 대응을 더 강하게 지지하며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볼수록 강력 대응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유권 분쟁이라는 국익 또는 정체성 관련 사안의 분석과 이해에는 국내적 사회 지표보다는 국가 간 상호 작용의 설명틀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은 이미 시스템 중심의 법적, 경제적, 안보 영역에서의 전략적 차원을 벗어나 각국에 유리한 국내 국제적 여론 형성의 전략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영유권 분쟁 관련 국내외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제어** 영유권 분쟁, 여론조사, 일본 서남부 지역, 사회심리지표, 로짓회귀분석

## I. 들어가며: 여론과 정부 정책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의 한일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냉각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논문은 영유권 문제를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한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약화된 일본 국민의 여론이 보수적인 아베 신조 정권의 등장에 기폭제가 되었다

\* 이 글은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인 '센카쿠 영유권 분쟁 관련 일본인의 의식조사 연구'로 진행되었음을 밝히며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통계 분석은 UC-San Diego 국승민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영유권 분쟁과 국내 정치 사이의 관계를 긴밀히 검증한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현상은 국민 여론이 영토 분쟁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다케시마,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여론과 홍보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2012년 9월 9일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두 정상이 영토 관련 갈등의 수위를 낮추자는 합의에 도달한 직후인 9월 11일부터 당시 민주당의 노다 정권은 1주일 동안 전국 70개의 신문에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은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영유권 분쟁이라는 국가 간 외교 사안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또는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전문성을 가진 정책 엘리트 집단과 비교해서 낮을 수 있지만(Yankelovich, 2005) 관련 여론이 50%라는 분기점을 넘기면 일본과 같은 참여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명한 정책, 선거 이슈로 떠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Midford, 2010). 이 연구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인식을 다양한 종속변수로 상정한 뒤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로 설정한 가설들을 무작위 설문조사와 정책 엘리트들과의 심층면담 등의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한중과 비교했을 때 일본 국민들의 영토 분쟁에 관한 인지도가 낮다는 관찰은(현대송, 2008)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0년 9월 7일 오전,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 '요나구니'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던 중국 어선에 경고를 보냈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어선이 다른 순시선 '미주기 호'의 선체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측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지만 같은 해 9월 24일 오키나와현 소속 나하(那覇)지방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돌연 처분 보류로 선장의 석방을 결정한다. 당시 음주상태로 밝혀진 중국인 선장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과 센고쿠(仙谷) 관방장관이 막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자세 대중국 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뒤이어 일본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충돌 당시의 상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해안보안청 소속 직원에 의해 언론에 노출되자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이명찬, 2012: 54-57).

약 1년 뒤 발생한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울릉/독도 방문 시도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영유권 관련 관심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2011년 8월 1일 자민당 소속의원 3인의 보수 정치인들의 입국이 한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자 다음 날인 8월 2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와 사실을 게재한다. 가장 보수적인 『산케이신문』은 독도 갈등을 2012년 총선, 대선에 대비한 한국 집권여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고(『産経新聞』, 2011/8/2)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영토갈등이 외교 문제화되어 입국 거부라는 조치가 취해진 전례가 없다는 비판으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동시에(『朝日新聞』, 2011/8/2) 같은 일자의 사설에서는 자민당 의원들의 행동도 신중한 전략도 없이 소동만을 일으키려는 퍼포먼스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朝日新聞』, 2011/8/2).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한일 경제 관계, 중국,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한일, 한미일 간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분석으로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経済新聞』, 2011/8/2).

2012년 8월 6일 한국의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일본의 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한일 관계의 악화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국내의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편협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NHK 뉴스워치, 2012/8/7),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의 만료와 함께 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온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후의 보신전략으로서 독도 방문을 결행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TV아사히 밤 10시 뉴스, 2012/8/8). 스캔들과 폭로 중심의 보도로 특화된 주간지들도 이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폭로기사들을 잇달아 게재하면서, 영토 갈등을 통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는 전대미문의 행태도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사건 뒤에 민주당의 노다 정권은 2012년 9월 11일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영토 분쟁에 관하여 민주당정권이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 대표적 극우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慎太郎) 전 동경도지사가 동경도 소속 행정구역으로 센카쿠열도의 매입을 추진한 것은(Wani, 2012), 센카쿠를 매입한 후

자신의 장남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 자민당 전 간사장이 총리로 당선이면 국가에 헌납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자료, 2012/8/30).

노다 정권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정책은 대중국 관계에서 전략적 실패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국유화까지 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12년 8월 말 노다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는 일본 정부의 국유화 정책 추진을 밝히지 않았고 약 열흘 뒤인 9월 9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움직임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이틀 뒤 의회에서 국유화 승인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외교적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1</sup>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진행된 일련의 사태로 일본 국민들의 영토 분쟁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2013년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영토 주권이 재차 강조되는 맥락에서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 국민들의 여론 또는 인식이라는 종속변수가 어떤 독립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 II. 선행 연구와 연구 가설

이미 중요한 분기점들을 지나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토

<sup>1</sup> 이 실패한 전략에 외교와 안보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당시 외교안보 보좌관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측근의 증언들이 있다(면담자료, 2012년 8월 28일). 2012년 5월 18일에 개최된 관계자회의에서 나가시마는 “국유화 조치가 동경도가 개인 소유자에게서 (센카쿠열도를) 매입하는 것보다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유화 작업의 진행을 주문했고 노다 총리 자신도 전후 최악의 중일 관계로 불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고 측근들이 증언하고 있다(면담자료, 2012년 8월 30일). 센카쿠열도의 국유화 의견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건으로 중국과 마찰을 일으켰을 때 처음 대두된 아이디어였으며, 2006년 당시 자민당 정부가 개인 소유주와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The Japan Times*, 2012/11/20, 2면).

분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현상유지가 계속되어온 이유가 집권 엘리트들의 권력지향성 때문이라는 설명 등(예: Bong, 2013)은 좀 더 비판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현상유지 → 도발적 강경노선 → 긴장 → 긴장 완화의 설명 사이클도(佐藤 壯, 2010) 보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배진수(2012)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15년 동안 발생한 한일 간의 독도 관련 이벤트의 발생 빈도수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발생한 전체 이벤트 건수의 60%에 이른다고 한다. 배진수의 분석에서 보충,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은 “왜 1990년 이후 영유권 관련 이벤트가 급증했는가?”와 “독도 관련 이벤트의 증감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이 논문은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일본의 경험적 사례에서 찾으려 한다.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학 그리고 기억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역사학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문서의 발굴과 고증에 치중하는 반면(송병기, 2010; 야나기하라, 2008) 국제법에서는 비교사례와 선례를 중심으로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양기, 2008; 다카스, 2008). 한편 국익 추구를 전제하는 국제정치학에서는 영유권 분쟁을 국가 간 이익경쟁으로 간주하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연구는 전통 안보 중심적 접근법과 통치 전략을 연결시키는 성향이 강하다.<sup>2</sup>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을 아우르는 기억연구는 인식의 형성기제에 집중하고 있다(Kim, 2012; Kwon, 2010). 한편 어민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남긴 기록과 구술사 중심의 방법론이 새로이 등장한 연구 추세다(福原裕二, 2010).

이 연구는 사회-심리적 기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Dill and Anderson, 1995) 여론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기억연구를 지향하며(Schwartz and Kim, 2010),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예측이 국익과 직결된 영유권 분쟁 관련 여론을 형성한다는 주장하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큰 가설을 설정한다.

<sup>2</sup>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이론들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꼽을 수 있으며 정체성, 도덕성 등을 주요 테마로 접근하는 구성주의는 국익 추구라는 대명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 ① 사회-심리적인 상황과 영유권 분쟁 인식

가설 1: 연령이 높을수록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는다.

가설 2: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는다.

가설 3: 일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는다.

가설 4: 분쟁 지역과 지리-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는다.

가설 5: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는다.

## ② 사회-심리적인 상황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

가설 6: 연령이 높을수록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높아진다.

가설 7: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높아진다.

가설 8: 일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높아진다.

가설 9: 분쟁 지역과 지리-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높아진다.

가설 10: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높아진다.

## ③ 사회-심리적인 상황과 정책의 방향에 관한 인식

가설 11: 연령이 높을수록 매파 정치인들과 강경정책을 지지한다.

가설 12: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매파 정치인들과 강경정책을 지지한다.

가설 13: 일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매파 정치인들과 강경정책을 지지한다.

가설 14: 분쟁 지역과 지리-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매파 정치인들과 강경정책을 지지한다.

가설 15: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매파 정치인들과 강경정책을 지지한다.

### III. 데이터 수집과 분석방법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1차 여론조사 설문지는 2012년 4월 중순경에 시마네, 히로시마 그리고 오이타 등 세 개의 현에 각각 500부씩 발송되었고 7월 말에 취합이 완료되었다. 조사 참가대상자는 일본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영전화회사인 NTT(Nippon Telephone and Telegraph) 사에서 발행하는 개인 주거지용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세 개 현의 시 단위 행정구역의 수가 각기 달라 500명을 기준으로 각 시 단위별로 정리된 여러 권의 전화번호부 전체에 기재된 총 인구수를 500으로 나누어 한 명씩의 응답자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마네, 히로시마 그리고 오이타 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사안과의 ‘지리-심리적 거리’에 근거를 둔다. 다케시마가 있는 오키 섬 부근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며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마네 현과 피폭 관련 전후 보상 등으로 역사 분쟁에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진 히로시마현, 그리고 규슈 지방의 대표적인 농경지역으로서 영토나 역사 분쟁 등과는 가장 지리-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이타 현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거리감의 차이에 따라서 영유권 관련 사안에 관한 의견과 정보, 지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 대신 3개 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sup>3</sup>

회송된 설문지 수는 시마네현 107부(정상 회신 94부, 주소 불명 6부, 우체국을 통한 수신 거부 1부, 반송 봉투를 사용한 백지회신 6부), 히로시마현 87부(정상 회신 75부, 주소 불명 8부, 수취인 사망으로 인한 반송 3부, 반송 봉투를 사용한 백지회신 1부), 그리고 오이타현 94부(정상 회신 84부, 주소 불명 9부, 반송 봉투를 사용한 백지회신 1부)로서 총 회신율은 시마네현 21.4%, 오이타현 18.6%, 히로시마현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상 회신율은 시마

<sup>3</sup> 세 지역에 관한 ‘지리-심리적 거리감’의 가설이 작위적일 수 있고 그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방법도 없다는 한계는 인정한다. 동시에 전국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웠던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난관들이 있었음을 밝힌다.



네현 18.8%, 오이타현 16.6%, 히로시마현 15% 순으로 나타났다.

회신율과 응답 내용의 차이는 사안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어떤 사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구술 항목에서의 응답율 차이와 응답 내용의 질적, 양적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히로시마현과 시마네현에 비해 오이타현의 경우 “왜 센카쿠열도(또는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지?” “2011년 9월 발생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 “2011년 8월 독도/다케시마 현지조사를 위해 방한한 3인의 자민당의원들의 행동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평가” 등의 상당한 지식, 정보 그리고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항목들에서 무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시마네현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며 논거를 제시하는 문항의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의 신문, 방송, 교육 등의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의 차이를 상당히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 신문의 보도 내용과 관심의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하는 주코쿠(中国) 지역의 대표신문인 『주코쿠신문(中国新聞)』(<http://www.chugoku-np.co.jp>)의 논조들을 분석한 결과, 『교토뉴스』 등의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실보도 중심의 관행을 취하고 있었으며,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관련 보도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타현의 대표신문인 『오이타고도신문(大分合同新聞)』(<http://www.oita-press.co.jp/>)의 경우 국제 문제에 할애되는 지면은 중앙지나 다른 두 지역신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편이었다. 2012년 8월 2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의 기사들 중 ‘다케시마’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총 100여 건에 이르나 취재 중심의 기사보다는 『교도통신(共同通信)』 등의 뉴스와이어 서비스에서 발신한 내용을 그대로 편집해서 기사화하는 관행을 취하고 있다. 전반적인 보도의 관점은 사실 중심이며 시각도 중립적인 편이다. 그 한 예로 독도(獨島)와 다케시마(竹島)를 병기한 기사들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을 들 수 있다. 2011년 3월 16일부터 11월 21일 사이의 기사를 ‘센카쿠열도’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도 약 100여 건에 이르지만 검색의 기간이 독도보다 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 갈등에 비해



센카쿠 분쟁에 할애된 지면의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평이나 기고보다는 사실, 사건 중심의 『오이타고도신문』 보도의 전반적인 논조는 과잉 반응의 자제와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일정 정도의 심리적, 지리적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들에서 특별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논조도 보이지 않지만, 독도에 비해 “다오위다오(釣魚島 내지는 釣魚台)”라는 중국어 병기 기사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마네현의 지방신문인 『산인추오신보(山陰中央新報)』는 영유권 관련 기사와 사설을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흐르는 분쟁을 관리, 통제하자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그런 성향이 이 연구의 대상인 세 지역 가운데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마네현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2012년 9월 7일자 센카쿠열도의 국유화 조치에 관한 사설에서 영유권 분쟁 관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 대만의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의 극단적 행동들을 통제할 역량이 커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sup> 2012년 9월 15일 신문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도라에몽’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홍콩에서 열렸다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중일 관계 개선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점이 주목된다.<sup>5</sup> 이와 같이 시마네, 히로시마 그리고 오이타현에서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논조나 관련 기사의 분량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조사의 응답률은 일본의 정부기관과 각 언론사들이 정기 여론조사 또는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의 60~65% 정도의 평균 회신율보다 40% 정도 낮게 나타났다.<sup>6</sup>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여론조사

<sup>4</sup> <http://www.sanin-chuo.co.jp/column/modules/news/article.php?storyid=534188033>(검색일: 2012. 11. 28).

<sup>5</sup> <http://www.sanin-chuo.co.jp/newspack/modules/news/article.php?storyid=1172399013>(검색일: 2012. 11. 28).

<sup>6</sup> 20%라는 낮은 응답률이 가설의 엄밀한 분석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전체 응답자 수가 440명에 이르러 분석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표본인구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Achen, 2002; Gujarati, 2002).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비율의 “잘 모름,” “무응답”의 항목과 이번 조사에서의 낮은 회신율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대답하기 어렵거나, 생각하기 싫다거나, 자신의 견해가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은 항목에 관하여 침묵하는 성향이 이러한 낮은 회신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Fukuoka, 2006). 이는 또한 영유권 관련 인식 조사라는 민감한 주제에 관한 거부감을 고려할 수 있겠고 또한 연구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듯하다(김미경, 2012a).

낮은 응답률과 함께 1차 설문조사는 예상치 못한 표본 인구의 편차라는 통계적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남성이며, 81%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전체 인구와 표본 인구 사이에 큰 간극이 있고 따라서 분석 결과가 객관화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절대다수가 남성인 이유는 주택과 전화번호를 소유한 대부분은 호주 또는 세대주였고, 이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인 까닭에 표본상의 편향이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들의 주택 소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택전화보다는 휴대폰의 사용을 선호하여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인구 자체가 적은 것으로 추후에 조사되었다.

이에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인구를 표본인구로 상정한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표본인구 추출의 대안인 인터넷 검색엔진 상의 홍보를 통한 여론조사 참가 섭외도 표본인구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년층일수록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인터넷 사용과 접속의 빈도수가 낮고 검색엔진의 조사 관련 홍보를 접한 다음에도 참가/불참가의 결정 과정에서 이미 주제에 관한 관심/무관심이라는 편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 공영방송인 NHK나 주요 5대 일간지도 전국 각지의 NTT 주거 전용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번호로 무작위 여론조사(RDD: Random Digital Dialing)를 실시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조사가 허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의 시간대 제약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차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2012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오이타현 벳푸(別府)시 소재 리츠메이칸(立命館) 아시아-태평양대학의 학부생 187명을 대상으로 제2차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학 일본인 학생들의

표 1 면담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 전문 분야 그리고 면담 일시

성별	연령대	직업	전문 분야	면담 일시
여	30대	변호사 (전직 외무성 공공외교부서 언론담당)	행정법	2012년 8월 28일
남	40대	기자	한일 관계	2012년 8월 28일
남	60대	법학자	일본 헌법	2012년 8월 29일
남	40대	중앙부처 공무원	미일 안보 관계	2012년 8월 30일

출신지는 전국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조금 더 많아 연령별, 성별 편향을 일정 정도 교정할 수 있었다.<sup>7</sup> 또한 설문지 내용에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9월 11일 노다 정권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 분석은 기타 여론 조사들과 여론 주도층과의 심층면담 자료들을 포함한다.<sup>8</sup> 심층면담은 2012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에서 수행되었다(표 1 참조).

#### IV. 설문 항목별 빈도수와 회귀분석 결과

설문조사 열여덟 개의 설문 항목에 따른 빈도수를 정리한 다음 로짓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서술된다.

<sup>7</sup> 제2차 조사가 임의적으로 추가되었고 결국 분석 결과의 엄밀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1차, 제2차 조사의 항목별 빈도수를 따로 분리하여 정리했고 로짓다중회귀분석은 같이 실시했다.

<sup>8</sup> 면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소속은 명시하지 않았다. 무작위 여론조사방법과 심층면담의 동시 수행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삼각측정 방식(triangulation)을 지향했다(Bickman and Rog, 2008; Creswell, 2008). 무작위 여론조사 방법과는 달리 심층면담은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쓰지 않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열린 응답(open-ended)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응답자 성별 분포(응답자수, %)<sup>9</sup>

거주지	남	여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85(90%)	7(7%)	2(2%)	94(100%)
히로시마현	65(87%)	8(11%)	2(3%)	75(100%)
오이타현	77(92%)	6(7%)	1(1%)	84(100%)
APU <sup>10</sup>	85(45%)	100(53%)	2(1%)	187(100%)
전체	312(71%)	121(28%)	7(2%)	440(100%)

## 1. 항목별 빈도수 정리

설문지 항목별 응답과 빈도수는 표 2와 같다.

제1차와 제2차 설문조사 자료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본 결과 전반적인 성별 분포가 남성 71%, 여성 28%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편향이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제1차 조사 참가자의 83%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령분포의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제2차 설문조사 자료를 포함한 결과 전반적인 표본 인구 분포가 10대 14%, 20대 28%, 30대 1%, 40대 3%, 50대 9%, 60대 18%, 70대 17%, 80대 11%, 90대 4%로 개선되었다. 이는 연령대별 인식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조사 참여자의 96%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일중 간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해 들은 바가 있었다. 지역별, 연령별 분포와는 상관없이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질문 항목에 뒤이은 정보 소스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TV, 신문이라고 답하고 있어 영유권 분쟁 관련 전문 지식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대중매체를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이용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김미경, 2012b). 분쟁 관련 인식과 정보원에 관련한 지역 차이는 매우 미미하며 10대, 20대의 경우 인터넷 정보 이용(65%)이 신문(58%)보다 높게 나타나며 가족(27%) 또는 친구(29%)와의 대화를 통한

<sup>9</sup> 퍼센트가 100으로 정확히 합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이유는 숫자를 %로 바꾸면서 반올림 처리했기 때문이다.

<sup>10</sup> 공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의 영어 약자인 APU를 사용한다.

표 3 응답자 연령별 분포(응답자수, %)

거주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전체
시마네현	0 (0%)	0 (0%)	1 (1%)	4 (4%)	16 (17%)	21 (22%)	36 (38%)	15 (16%)	1 (1%)	94 (100%)
히로시마현	0 (0%)	0 (0%)	0 (0%)	4 (5%)	8 (11%)	26 (35%)	18 (24%)	18 (24%)	1 (1%)	75 (100%)
오이타현	0 (0%)	0 (0%)	0 (0%)	3 (4%)	15 (8%)	31 (37%)	19 (23%)	14 (17%)	2 (2%)	84 (100%)
APU	62 (33%)	125 (6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62 (14%)	125 (28%)	1 (0%)	11 (3%)	39 (9%)	78 (18%)	73 (17%)	47 (11%)	4 (1%)	440 (100%)

표 4 '일중 간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해 들은 적이 있는가?'(응답자수, %)

거주지	있다	없다	모른다	전체
시마네현	91 (97%)	2 (2%)	1 (1%)	94 (100%)
히로시마현	71 (95%)	0 (0%)	4 (5%)	75 (100%)
오이타현	82 (98%)	1 (1%)	1 (1%)	84 (100%)
APU	179 (96%)	6 (3%)	2 (1%)	187 (100%)
전체	423 (96%)	9 (2%)	8 (2%)	440 (100%)

정보 습득이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10%)고 답한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69%의 다수가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믿고 있으며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옛날부터 일본영토”, “일본의 고유영토”, “일본인들이 어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음”, “일본인들이 살고 있음”, “일본인들의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음”,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함” 등의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 ‘센

표 5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영토인가?'(응답자수, %)

거주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70 (74%)	0 (0%)	13 (14%)	11 (12%)	94 (100%)
히로시마현	50 (67%)	0 (0%)	11 (15%)	14 (19%)	75 (100%)
오이타현	68 (81%)	1 (1%)	13 (15%)	2 (2%)	84 (100%)
APU	117 (63%)	12 (6%)	50 (27%)	8 (4%)	187 (100%)
전체	188 (69%)	13 (3%)	87 (20%)	35 (8%)	440 (100%)

표 6 '센카쿠열도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응답자수, %)

거주지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90 (96%)	3 (3%)	1 (1%)	94 (100%)
히로시마현	71 (95%)	0 (0%)	4 (5%)	75 (100%)
오이타현	73 (87%)	3 (4%)	8 (10%)	84 (100%)
APU	121 (65%)	61 (33%)	5 (3%)	187 (100%)
전체	355 (81%)	67 (15%)	18 (4%)	440 (100%)

카쿠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믿는 응답자는 3%에 불과하지만 무시하기엔 상당한 분포인 20%와 8%가 각각 "모른다"와 "무응답"이라는 애매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아니다"와 "모른다"의 응답이 10대, 20대의 연령층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무응답은 일반인 집단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3%가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현 관련 사안들(예: 미군기지 이전, 미군 관련 범죄 등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오키나와현의 행정 구역인 센카쿠열도의 위치도 자주 각인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차 조사 응

표 7 '2011년 9월 발생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의 평가(응답자 수, %)

항목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APU	전체
매우 잘 대응했다	6 (6%)	4 (5%)	7 (8%)	2 (1)	19 (4%)
잘 대응했다	11 (12%)	16 (21%)	11 (13%)	23 (12)	61 (14%)
보통이다	13 (14%)	12 (16%)	15 (18%)	28 (15)	68 (15%)
잘못 대응했다	27 (29%)	19 (25%)	28 (33%)	40 (21)	114 (26%)
매우 잘못 대응했다	18 (19%)	10 (13%)	12 (14%)	15 (8)	55 (13%)
잘 모르겠다	10 (11%)	5 (7%)	7 (8%)	69 (37%)	91 (21%)
무응답	9 (10%)	9 (12%)	4 (5%)	10 (5%)	32 (7%)
전체	94 (100%)	75 (100%)	84 (100%)	187 (100%)	440 (100%)

답자들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안 관련 구체적인 관심도가 낮은 연령층에서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양도 낮음을 반영한다. 이 설문 항목에서 1차 조사의 결과는 사안 중심으로 2차 조사의 결과는 연령별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사안의 관심도와 정보 소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즉시성을 가진 인터넷보다 신문 등을 포함한 전통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좀 더 오래 기억되는 차이가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한 정보 교환도 그 정확도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응답자의 39%가 지역과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약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일본 국내법에 따라 중국인 선장을 국내 재판에 회부했어야만 했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고 대중국 굴종외교, 일본의 주권 침해 등의 이유들도 나타났다. 소수인 1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익에 도움이 될



표 8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일중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인가?'(응답자수, %)

거주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40 (43%)	18 (19%)	26 (28%)	8 (9%)	94 (100%)
히로시마현	32 (42%)	16 (21%)	20 (27%)	7 (9%)	75 (100%)
오이타현	36 (43%)	17 (20%)	27 (32%)	4 (5%)	84 (100%)
APU	163 (87%)	5 (3%)	18 (10%)	1 (1%)	187 (100%)
전체	271 (61%)	56 (13%)	92 (21%)	20 (5%)	440 (100%)

표 9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응답자수, %)

거주지	있다	없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15 (16%)	34 (36%)	35 (37%)	10 (11%)	94 (100%)
히로시마현	11 (15%)	28 (37%)	31 (41%)	5 (7%)	75 (100%)
오이타현	20 (24%)	35 (42%)	26 (31%)	3 (4%)	84 (100%)
APU	101 (54%)	33 (18%)	52 (28)	1 (1)	187 (100%)
전체	147 (33%)	130 (30%)	144 (33%)	19 (4%)	440 (100%)

것이 없다”는 등의 현실적 계산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평가는 지역이나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수인 61%가 센카쿠 영유권으로 일중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인식하며 그 이유는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예: “중국의 자원 욕심”, “국제적 룰을 지키지 않은 중국의 태도” 등)이 주를 이룬다. 동시에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13%에 달하며 “모른다”와 “무응답”도 각각 21%, 5%에 달해 국가 간 외교 분쟁 사안에 관한 일반인들의 자기 판단 유보의 자세를 보여준다. 제2차 조사에서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강도 높

표 10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 관해 들은 적이 들은 적이 있는가?'(응답자수, %)

거주지	있다	없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84 (89%)	1 (1%)	1 (1%)	8 (9%)	94 (100%)
히로시마현	62 (83%)	0 (0%)	3 (7%)	10 (13%)	75 (100%)
오이타현	77 (92%)	0 (0%)	7 (8%)	0 (0%)	84 (100%)
APU	176 (94%)	8 (4%)	0 (0%)	3 (2%)	187 (100%)
전체	399 (91%)	9 (2%)	11 (3%)	21 (5%)	440 (100%)

은 중국의 반응에 관한 일본인들의 우려로 분석된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9·11 국유화 조치 이전의 설문조사에서 일반인들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두 배가량 많았던 응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국유화 이후 중국의 해안순시선과 어선들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일본의 순시선과 충돌하는 양상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고조된 긴장감을 반영한다. 33%의 “모른다”라는 응답도 30%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응답만큼 많이 나타나서 일본인들의 정리되지 않은 대중국관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와 군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견제하자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전후 평화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인식 차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에 관해 들은 적이 있고 정보를 접하게 된 경로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TV, 신문이라고 답했다. 소수의 응답자만이 가족, 지인, 교과서라고 답하여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인식 형성은 일상적인 대화나 정규 교육보다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20대 연령층은 ‘인터넷 정보 이용’(61%)의 경로가 ‘신문’(6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며 ‘가족(27%) 또는 친구(28%)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

표 11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인가?'(응답자수, %)

거주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81 (86%)	0 (0%)	6 (6%)	7 (7%)	94 (100%)
히로시마현	60 (80%)	0 (0%)	10 (13%)	5 (7%)	75 (100%)
오이타현	63 (75%)	1 (1%)	18 (21%)	2 (2%)	84 (100%)
APU	89 (48%)	6 (3%)	84 (45%)	8 (4%)	187 (100%)
전체	293 (67%)	7 (2%)	118 (27%)	22 (5%)	440 (100%)

표 12 '독도/다케시마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응답자수, %)

거주지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84 (89%)	4 (4%)	6 (6%)	94 (100%)
히로시마현	64 (85%)	6 (8%)	7 (5%)	75 (100%)
오이타현	71 (85%)	6 (7%)	7 (8%)	84 (100%)
APU	117 (63%)	64 (34%)	6 (3%)	187 (100%)
전체	336 (76%)	80 (18%)	26 (6%)	440 (100%)

를 얻는 비율이 '교과서에서 읽고 배웠다'(13%)는 비율보다 높다.

응답자의 다수인 67%가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는 응답이 2%에 불과한 동시에 "모른다"는 27%, "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 일반인들과 10대, 20대의 차이점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답한 비율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낮다는 점과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일반인 응답자의 두 배를 넘고 있는 현상이다.

일본 국민들의 독도/다케시마 갈등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표 13** '2011년 8월 독도/다케시마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한 3인의 자민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응답자수, %)

항목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APU	전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10 (11%)	5 (7%)	8 (10%)	1 (1%)	24 (5%)
역할을 했다	20 (21%)	17 (23%)	11 (13%)	13 (7%)	61 (41%)
보통이다	13 (14%)	12 (16%)	15 (18%)	24 (13%)	64 (15%)
현명하지 않았다	8 (9%)	8 (11%)	11 (13%)	32 (17%)	59 (13%)
매우 현명하지 않았다	3 (3%)	4 (5%)	5 (6%)	8 (4%)	20 (5%)
잘 모르겠다	28 (30%)	22 (29%)	25 (30%)	90 (48%)	165 (38%)
무응답	12 (13%)	7 (9%)	9 (11%)	19 (10%)	47 (11%)
전체	94 (100%)	75 (100%)	84 (100%)	187 (100%)	440 (100%)

다수인 76%가 독도/다케시마의 위치를 알고 있다. “모른다”는 응답은 10대, 20대 응답자 층에서 일반인 응답자들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마네현 출신 고령층 연령대의 응답자들과 일본 전국 각 지역 출신인 낮은 연령대 응답자들의 분포 차이에서 기인한다.

일반 일본 국민들은 울릉도(독도) 방문 시도 건으로 한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은 자민당 의원 3인의 행동에 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이 항목에 관해서도 시기별, 연령별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9·11 국유화 조치 이전에 실시된 제1차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보이는데, 이는 보수 정치인들의 자발적 시도가 나올 때까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온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강경 대응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행동으로 나선 정치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많았다. 10대와 20대 응답자들에게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낮은 연령층일수록 2년여 전

표 14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인가?'(응답자수, %)

거주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39 (41%)	18 (19%)	30 (32%)	7 (7%)	94 (100%)
히로시마현	35 (47%)	15 (20%)	22 (29%)	3 (4%)	75 (100%)
오이타현	32 (38%)	23 (27%)	25 (30%)	4 (5%)	84 (100%)
APU	131 (70%)	15 (8%)	34 (18%)	7 (4%)	187 (100%)
전체	237 (54%)	71 (16%)	111 (25%)	21 (5%)	440 (100%)

표 15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응답자수, %)

거주지	있다	없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17 (18%)	35 (37%)	36 (38%)	6 (6%)	94 (100%)
히로시마현	10 (13%)	39 (52%)	23 (31%)	3 (4%)	75 (100%)
오이타현	11 (13%)	45 (54%)	23 (27%)	5 (6%)	84 (100%)
APU	58 (31%)	68 (36%)	52 (28%)	7 (4%)	187 (100%)
전체	96 (22%)	187 (43%)	134 (30%)	21 (5%)	440 (100%)

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1차 조사의 응답은 여러 전망이 공존하여 “악화됨”, “악화되지 않음”, “모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미래예측 사안이라는 설문문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2차 조사의 결과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지만 “모른다”와 “있다”도 각각 30%,

표 16 '일본은 아시아 국가인가?'(응답자수, %)

거주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70 (74%)	6 (6%)	10 (11%)	8 (9%)	94 (100%)
히로시마현	52 (69%)	3 (4%)	13 (17%)	17 (19%)	75 (100%)
오이타현	60 (71%)	2 (2%)	13 (15%)	9 (11%)	84 (84%)
APU	115 (61%)	14 (7%)	46 (25%)	12 (6%)	187 (100%)
전체	297 (68%)	25 (6%)	82 (19%)	46 (10%)	440 (100%)

22%로 무시할 수 없는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1987년 NHK의 여론조사에서 57%의 응답자가 일본이 서양의 일부라고 응답한 것과는 달리 높아진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Hastings and Hastings, 1988: 131).<sup>11</sup>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 경쟁력의 상실과 성장 동력의 둔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위기감, 외교적 고립에 관한 우려, 일본 국내 정치의 보수화를 둘러싼 이념대립 등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구호는 영토 분쟁과 되살아나고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일본의 서양과 아시아 사이의 정체성은 정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미경, 2007).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전망이 3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모른다”가 각각 27%와 20%의 분포로 나타난다. “밝다”와 “무응답”이 각각 10%와 6%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안한 미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불안이 공세적 민족주의로 연결되어 좀 더 강한 영유권 주장의 행태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연합뉴스, 2013/3/9).

지난 9월 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sup>11</sup> 이 조사는 일본의 서남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NHK의 여론 조사는 참고 정보로 인용했다.

표 17 '일본의 미래는?'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응답자수, %)

거주지	밝다	보통이다	어둡다	모른다	무응답	전체
시마네현	11 (12%)	37 (39%)	30 (32%)	10 (11%)	6 (6%)	94 (100%)
히로시마현	6 (8%)	26 (35%)	32 (43%)	6 (8%)	5 (7%)	75 (100%)
오이타현	12 (14%)	29 (35%)	28 (33%)	13 (15%)	2 (2%)	84 (100%)
APU	16 (9%)	26 (14%)	71 (38%)	61 (33%)	13 (7%)	187 (100%)
전체	45 (10%)	118 (27%)	161 (37%)	90 (20%)	26 (6%)	440 (100%)

표 18 '지난 9월 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관한 평가'(응답자수, %)

항목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잘 모름	무응답	전체
A P U	18 (10%)	21 (11%)	18 (10%)	24 (13%)	24 (13%)	21 (11%)	61 (33%)	187 (100%)

표 19 '지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관한 평가'(응답자수, %)

항목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	잘못 했다	매우 잘못했다	잘모름	무응답	전체
A P U	3 (2%)	5 (3%)	14 (7%)	50 (27%)	51 (27%)	56 (30%)	8 (4%)	187 (100%)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유보적인 반응이다. 각기 다른 평가가 골고루 분포한 가운데 “무응답”이 33%로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다. 일본 언론의 평가처럼 국내 정치적 계산에서 이전까지는 “금단의 카드”로 인식되던 영유권 갈등을 사용한 결과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표 18에 나타나는 일본 정부의 극단적인 움직임에 관하여는 평가 유보의 자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유권 분쟁은 결국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관점 상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V. 로짓회귀분석 결과

먼저 사회, 경제지표와 센카쿠 영유권 관련 가설 분석을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logit multivariate analysis)의 결과를 보면 가설 1(연령)만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영유권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며, 여기서의 종속 변수는 센카쿠가 일본 영토이다/아니다, 독립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지역, 일본의 미래에 대한 판단,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 등이 포함되었다(표 20 참조).<sup>12</sup> 독도 영유권 관련 가설 분석의 결과도 가설 1(연령)만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카쿠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영유권의 인식이 강해진다.

중국의 위협에 관한 회귀분석은 0.05의 유의 수준으로는 어떤 가설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0.1의 유의수준으로 보면 가설 8(일본의 미래)만 타당하게 나타난다.<sup>13</sup> 여기서 종속 변수는 센카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일본 공격 가능성, 독립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지역, 일본의 미래에 대한 판단,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 등이다. 즉,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볼수록 중국의 위협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0.05의 유의 수준에서는 아무런 가설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0.1 유의 수준에서는 일본의 미래(가설 8)와 아시아적 정체성(가설 10)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한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한다.

<sup>12</sup> 아시아적 정체성은 ‘일본은 아시아 국가입니까?’라는 설문 조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16 참조.

<sup>13</sup> 데이터의 일본 미래(ja.future) 변수에서 전체 응답의 20%를 차지하는 ‘모른다’를 missing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모른다’를 ‘보통이다’와 함께 중간 값으로 코딩하면 유의도가 높은 다른 분석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의 분석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할지에 관해선 추후의 작업으로 남기겠다.

표 20 로짓 회귀분석 결과<sup>14</sup>

독립변수/종속변수		종속변수: 가. 영유권에 대한 인식, 나.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다. 정책적 지지 방향		
가. 영유권에 관한 인식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age)	0.267308	0.118768	2.251	0.0244*
학력(edu)	-0.034389	0.117178	-0.293	0.7692
지역(region)	0.014139	0.096346	0.024	0.8931
일본의 미래(ja.future)	0.014139	0.096346	0.024	0.8931
아시아적 정체성(ja.asia)	-0.00312	0.29173	-0.0243	0.8765
AIC	153.25			
나. 중국과 한국의 위협에 관한 인식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age)	0.4001	0.1326	3.017	0.0025**
학력(edu)	0.1640	0.1320	1.242	0.2143
지역(region)	0.0952	0.0814	1.139	0.1978
일본의 미래(ja.-future)	-0.2255	0.3194	-0.706	0.4801
아시아적 정체성(ja.-asia)	-0.1893	0.2081	-0.6521	0.3709
AIC	185.1			
다. 정책적 지지방향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age)	-0.15131	0.10808	-1.400	0.1615
학력(edu)	0.10242	0.09928	1.032	0.3023
지역(region)	0.09781	0.07823	0.0764	0.2671
일본의 미래(ja.-future)	0.53129	0.27930	1.902	0.0571
아시아적 정체성(ja.-asia)	0.02378	0.09785	0.7923	0.1697
AIC	155.46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에 관한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0.05 유의수준에서는 채택된 가설이 없지만, 0.1 유의수준에서 가설 12(학력), 가설 13(일본의 미래), 가설 14(지역) 그리고 가설 15(아시아적 정체성)가 채택되었다. 여기서의 종속 변수는 일본 해안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처리 관련 항목이며 독립변수는 위와 동일하다. 즉,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독도/다케시마와 심리적-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아시아적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본 정부의 강경

<sup>14</sup> 통계적 유의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0 '\*\*\*\*' 0.001 '\*\*' 0.01 '\*' 0.05 '.' 0.1 ' ' 1

대응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가설 13과는 반대로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할수록 강경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일본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표와 영유권 관련 인식은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연령, 교육 수준, 지역, 일본의 미래,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다섯 가지 독립변수들 중에 연령이 높을수록 센 카쿠와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해짐을 알 수 있고,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할수록 중국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강력 대응을 더 강하게 지지하며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볼수록 강경 대응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VI. 나오며: 영유권 분쟁에서의 국가 간 상호작용

이 여론조사는 “일본 국민들은 다케시마를 100%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라는 나가시마의 관찰과 상당히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월간조선』 2011/9월호, 160면). 연령, 일본의 미래, 아시아적 정체성, 지역별 차이 등이 영유권 관련 사안을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카하 츠네오(赤羽 恒雄)의 북방 영토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북방 영토를 일본 소유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자 교신, 2012/7/27).

이에 향후 연구는 기존의 현상유지 → 도발적 강경노선 → 긴장 → 긴장 완화라는 단면적이고 순차적 사이클보다는 작용(긴장/현상유지/화해) → 반작용(긴장/현상유지/화해)의 입체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작용의 설명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매개변수가 여론(또는 인식)이라고 접근하는 관점이 바람직하게 보인다.<sup>15</sup> 일본인들의 영토 집착은 사회 각 계층을 아우르며 그 이유는 “영토가 넓어야 일본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

<sup>15</sup> 작용과 반작용은 상호적이면서도 동시적(interactive)인 관계를 가지기에 작용 시작의 기제를 따지는 행위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라의 주장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일본의 공헌이 지대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배은망덕”이라는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집단적 역사-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버블 경제가 정점에 달했던 1980년대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나 강한 리더십으로 경제 부흥을 꾀한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기간에도 일본 국민들의 영유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강했던 현상을 설명한다.

고노 마사루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실시한 패널 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센카쿠열도의 국유화 조치 이후 일본 국민들의 대한국, 대중국 체감온도가 급랭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저자세 외교에 관한 혹독한 비판이 나타났다.<sup>16</sup> 특히 “자위대를 동원해서라도 한국의 실효지배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20대 응답자의 약 24%, 30대 응답자의 23%, 40대의 20%, 50대의 18%, 60대 이상 응답자의 13%가 동의함으로써 강경 대응 방안을 찬성하는 태도와 연령과는 반비례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전쟁과 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사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読売新聞』, 2012/11/12).

국민 여론의 보수화 추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산케이신문』의 2008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인가?’라는 질문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73.7%에 달했으며 ‘일본 정부가 더 강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가?’라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75%에 이르렀다.<sup>17</sup> 1996년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은 타당한가?’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가 52.6%에 달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11.6%, ‘모르겠다’는 응답은 35.8%로<sup>18</sup> 일본 국민들의 일관된 영유권 인식을 보여준다.

<sup>16</sup> 2012년 11월 24일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9.2%로 나타났고, 중국에 대해 “친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 보다 8.3%포인트 감소한 18%로 두 항목 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일본인 ‘한국인 호감도,’ 62% → 39%로 급락”(2012년 11월 24일, A3).

<sup>17</sup> 『産経新聞』, 2008년 8월 4일자, 박창건의 논문 8쪽에서 인용.

<sup>18</sup> 『産経新聞』, 1996년 2월 19일자, 박창건의 논문 8쪽에서 인용.

이는 또한 현재의 영유권 분쟁으로 보수 세력들의 ‘한국 도발론’을 더 완고하게 만들어 폭력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어필하는 대중 전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면담자 중 한 명은 “중전 이후 일본이 먼저 중국과 한국을 향해 도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다케시마 방문과 마찬가지로 항상 한국이 먼저 도발을 하고 일본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다”라는 여론 지도층의 부정적 대한국 인식을 피력했는데(면담자료, 2012/08/29), 이는 분쟁의 역사적 정보 부족과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성환은 경상북도가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본 구상조차도 없었으나, 일본 측의 자의적인 조례안 통과에 자극을 받아 2006년 8월에 ‘독도수호 경상북도 신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이 1989년 10월 16일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한 이후 1992년 한국 측의 방문단을 맞을 준비를 하던 시마네현 측이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현청 건물에 내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 방안과 수위를 놓고 고심한 사실 등은 ‘한국 도발론’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3월 15일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자매결연 파기의 배경에도 ‘다케시마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TV 광고를 적극적으로 방송한 시마네현 측의 도발에 직접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성환, 2010).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민주당의 영토 정책은 민주당 정권보다 훨씬 더 보수화, 강경화되었고(『조선일보』, 2012/11/21), 2013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최초로 중앙정부 관리가 참석하여 그 의미를 전국적 차원으로 격상시켰다(연합뉴스, 2013/2/22일). 자민당은 선거 공약이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동아일보』, 2012/11/22) 이는 아베 정권의 지지도를 더 높이는데 기여했다. 강경해지는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한중일 간의 영토 분쟁(Wani, 2012)은 문화-심리적 측면도 강하여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웃국가는 몹시 부담스럽다”,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국가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파의 자기성찰의 결여와 몰역사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Sugimoto, 2012).<sup>19</sup>

여론의 향방은 이미 영토 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고, 이에 중일 양국은 국내, 국제 사회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홍보 전략에 매진하고 있다.<sup>20</sup> 특히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과는 달리 일본이 독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기에 국가 간 상호작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서 “폭력과 야욕으로 탈취한 타국의 영토를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는 후 패전한 일본은 대부분의 식민지를 포기했었다. 작금의 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서 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한국전이 진행 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있다. 구소련의 팽창을 경계하기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이 고의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애매모호하게 남겨 두었고, 이를 배경으로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속내에는 일본이 식민지 쟁탈을 위해 “폭력과 야욕”을 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려는 명예회복 의식이 숨어 있다(Kim, 2012).

일본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국민 여론몰이 전략은 아시아에서의 영유권 갈등이 이미 법적, 경제적 영역을 넘어선 인식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자국민 교육과 홍보는 유리한 기억의 고지, 인식의 영역을 선점하려는 전략이기에 현재의 편향적 인식이 미래의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일본 국민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투고일: 2014년 12월 10일 | 심사일: 2015년 1월 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18일

<sup>19</sup> 우경화의 맥락 속에서 영토 갈등이 역사 문제인지 영토 문제인지에 관한 일본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예로 2012년 9월 28일, 천 명 이상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서명한 - 일본 시민들에게 고향: 영토 문제의 악순환을 막읍시다!(- 日本の市民のアピール, 2012년 9월 28일 「領土問題」の悪循環を止めよう!)가 있다.

<sup>20</sup> 예들로 “海外世論が重要” 首相, 領土問題で(<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1218/plc13121817310016-n1.htm>(검색일: 2014년 1월 2일), 安倍首相が領土問題で “海外世論の形成”을 指示, “北朝鮮みたいだ” “中韓朝で日本を倒そう” —中国ネットユーザー—(<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220-00000010-xinhua-cn>(검색일: 2014. 1. 2))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미경. 2007. “일본인들의 한국인관, 전쟁기억, 그리고 한일관계 - 애매모호한 기억과 전략적 계산의 동시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8권, 77-110.
- \_\_\_\_\_. 2012a. “이 상황은 정치의 영역인가 아니면 학문의 영역인가? 특별기고 ‘영유권 분쟁 관련 일본인의 의식조사’를 하며 겪은 일.” 서울: 『교수신문』, 6월 25일.
- \_\_\_\_\_. 2012b. “독도 갈등의 순기능.” 서울: 『조선일보』, 1월 18일.
- 김병렬. 2008. “17세기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다카스 씨제이. 2008. “식민주의에 대한 심문: 바카시, 식민주의 책임, 그리고 절실한 유럽중심주의적인 국제법의 악령 타파.”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동아일보』. 2008. “일 문부성, ‘독도는 일본 땅’ 교육 강화.” 5월 19일, A2면.
- \_\_\_\_\_. 2012. “평화헌법 부정, 제국 일본” 회귀하는 자민. 11월 22일, A2면.
- \_\_\_\_\_. 2012. “일본인 ‘한국인 호감도,’ 62% → 39%로 급락.” 11월 24일, A3면.
- 박창건. 2010. “일본의 독도(독도)협상정책.” 다케시마/독도연구회 제24회 일한·일조교류사연구회.
- 배진수. 2012. “일본의 독도 도발과 한국의 영토 주권 수호 현황 및 추이: 독도 이벤트데이터(Event-Data) 구축을 통한 실증적 분석.” 『외교안보연구』 8권 1호, 121-156.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서울: 역사공간.
- 신이치 아라이. 2008.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안토니 양기. 2008. “국제법, 식민주의와 영토 분쟁: 개관.”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야나기하라 마사하루. 2008. “영유권 관점에서 본 ‘竹島一件’ 재고.”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연합뉴스』. 2013. “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강행...정부 강력항의.” 2월 22일.
- \_\_\_\_\_. 2013. “일본총리 교전권 부정 헌법 9조 개정해야.” 3월 9일.
- 요시부미 와카미야. 2008. “21세기 독도 문제의 해결에 관한 단상.” 동북아역사재단/인하대학교 공동주최 국제회의. 서울. 11월.



- 『월간조선』, 2011. 현안 인터뷰, 나가시마 아키하사, “독도는 한국 땅, 다케시마는 일본땅. 일본은 다케시마 절대 포기 못해.” 9월호.
- 이명찬.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3권, 52-83.
- 이성환. 2010. “독도와 경상북도.” 다케시마/독도연구회, 제24회 일한·일조 교류사연구회, 日韓領土権問題をめぐる国家, 地域, 歴史の交錯 세미나. 히로시마. 7월.
- 『조선일보』, 2012. “일, 자민 공약 우경화, 주변국과 마찰 예고.” 11월 21일.
- 최홍배. 2004. “은주시청합기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 7-22.
- 현대송. 2008.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독도, 야스쿠니, 위안부, 교과서 문제의 근원과 쟁점』. 서울: 나남.
- 『日本経済』, 2011년 8월 2일, 3면.
- 日本の市民のアピール. 2012. “領土問題”の悪循環を止めよう! 9월 28일.
- 佐藤 壮. 2010. “領土問題における正統化戦略と竹島.” 다케시마/독도연구회, 제24회 일한·일조 교류사연구회, 日韓領土権問題をめぐる国家, 地域, 歴史の交錯 세미나. 히로시마. 7월.
- 『山陰中央新報』, 2011년 1월 3일, 6면.
- \_\_\_\_\_. 2011년 1월 6일, 6면.
- \_\_\_\_\_. 2012년 1월 8일, 6면.
- \_\_\_\_\_. 2012년 9월 7일, 6면.
- \_\_\_\_\_. 2012년 9월 15일, 6면.
- 『産経新聞』, 1996년 2월 19일, 3면.
- \_\_\_\_\_. 2008년 8월 4일, 3면.
- \_\_\_\_\_. 2011년 8월 2일, 3면.
- \_\_\_\_\_. 2013년 12월 18일(<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1218/plc13121817310016-n1.htm>, 검색일: 2014. 1. 2).
- 『朝日新聞』, 2011년 8월 2일, 3면.
- 『NHK 방송』, 2012년 8월 7일, 9시 뉴스워치.
- 『山口新聞』, 2012년 2월 23일, 6면.
- Yahoo Japan. 2013년 12월 20일(<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220-00000010-xinhua-cn>(검색일: 2014. 1. 2).
- 『大分合同新聞』, 2012년 10월 24일, 6면.
- \_\_\_\_\_. 2012년 10월 27일, 6면.

- 『読売新聞』. 2012년 11월 12일, 3면.
- 『テレビ朝日』. 2012년 8월 8일, 밤 10시 뉴스.
- 福原裕二. 2010. “竹島/独島研究における第三の視角, 交渉する東アジア: 近代から現代まで.” 『崔吉城先生古稀記念論文集』. 東京: 風響社.
- Achen, Christopher. 2002. *Interpreting and Using Regression*. New York: Sage.
- Bickman, Leonard and Debra Rog, eds. 2008.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 New York: Sage.
- Bong, Youngshik. 2013. “The Dokdo Built to Last.” *Memory Studies Journal* 6(4), 191-203.
- Creswell, John. 200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New York: Sage.
- Dill, Jody C. and Craig Anderson. 1995. “Effects of Justified and Unjustified Frustration on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1), 39-65.
- Fukuoka, Kazuya. 2006. *Collective Memory and External Others: Explaining Japan's Ideational Shift on War Memories in the 1990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USA.
- Gujarati, Damar. 2002. *Basic Econometrics* (4th edition). New York: McGraw Hill Higher Education.
- Hara, Kimie. 2012.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Frontier Problems in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 Sixty Year Perspective.” *The Asia-Pacific Journal* 10, Issue 17(1), April 23.
- Hastings, Elizabeth H. and Philip K. Hastings, eds. 1988. *Index to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1986-1987*. Westport, CN: Greenwood, CN: Greenwood Press.
- The Japan Times*. 2012. “Senkaku Snafu Laid to Broad Miscalculation.” November 20.
- Kim, Mikiyoung. 2012. “A War of Memories: Dissecting Doko/Takeshima Dispute.” *Global Asia* (September), 74-77.
- Kwon, Heonik. 2010. “Parallax Visions in the Dokdo/Takeshima Disputes.” In Mikiyoung Kim and Barry Schwartz, eds., *Northeast Asia's Difficult Past: Essays in Collective Memory, 229-242*.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ublishers.

- Midford, Paul. 2010. *Rethinking Japanese Public Opinion and Security: From Pacifism to Real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Barry and Mikyoung Kim. 2010. "Introduction: Northeast Asia's Memory Problem." In Mikyoung Kim and Barry Schwartz, eds., *Northeast Asia's Difficult Past: Essays in Collective Memory*, 1-30.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Publishers.
- Sugimoto, Mikio. 2012. "The Annexation of Korea Was Inevitable," A New Look at the Annexation of Korea, Committee against Government Apologies to Korea,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s ([http://www.sdh-fact.com/CL02\\_1/89\\_S4.pdf](http://www.sdh-fact.com/CL02_1/89_S4.pdf) (검색일: 2012. 8. 20)).
- Wani, Yukio. 2012. "Barren Senkaku Nationalism and China-Japan Conflict." *The Asia-Pacific Journal* 10, Issue 28(4), July 9.
- Yankelovich, Daniel. 2005. "Poll Positions."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16.

---

**Abstract**

## A Study of Opinion Poll Survey on Japanese Perceptions of Territorial Disputes: With a Focus on Southwestern Regions of Japan

Mikyoung Kim Hiroshima City University-Hiroshima Peace Institute

---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domestic socio-psychological indices and Japanese perception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with Korea and China. Drawing on triangulation research methods, this article finds a weak causality between the two domains. The logit multivariate analyses do not support most of the hypotheses except five explanatory variables of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region, Japan's Asiatic identity, and Japan's future projection. These findings lead to two conclusions. First, the conventional cyclical theorem (i.e., status quo → provocation → rise of tension → relaxation of tension) needs to be revised to a more multidimensional and interactive model. Second, the rising importan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s of the disputed territories deserve more careful attention for it serves as a mediating variable determining the policy options of tension, status quo and reconciliation.

**Keywords** | territorial disputes, opinion poll survey, southwestern regions of Japan, socio-psychological indices, logit multivariate analysis

